

여행사·놀이시설 개인정보 실태 점검

“여행사측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며 여권사본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여권사본을 통째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스킹처리하지 않은 채로 보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생년월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려고 보니 입사지원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뒷자리까지 다 적으라고 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귀가하던 중 채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채용도 안할 거면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여행사, 체육·놀이시설, 회의장 등 시설·문화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12

행안부, 12~27일까지 관리실태 파악 국제해상여행·인력공급업체에 집중 “작년 32건 적발...안전조치 위반 1위”

일부터 27일까지다. 대상은 국제 여행객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상여행업체, 축구단, 키즈카페, 모인장소 대여업체 및 소독방제업체 중 기업 규모와 인지도, 관중·회원수 등을 감안해 선정된 16개 기관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위반(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이다. 행안부는 수검기관을 직접 방문

해 관련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여권정보를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국제 해상여행업체의 개인정보 과다수집·불법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로 규모가 커지면서 구직신청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가 늘고 있는 인력 공급·파견업체 4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암호화 접근통제·권한,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이 19건(5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미파기 또는 분리보관 미비

는 7건(22%)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동일업종과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자정적인 보호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대법, 강운태 전 광주 시장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악회는 강 전 시장이 총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산악회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의 동원 방식,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회비를 납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1903명 외에 선거구민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5년 5월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광주 남구 지역주민 597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 7190만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단에 봄을 심어요 1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꽃식재 작업을 하고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 ‘뇌물’ 징역 2년6월 확정...직 상실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61) 무안군수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김 군수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

를 앞두고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승진을 부탁하며 청탁 명목으로 건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무안군에서 발주한 청계면 서호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수행업체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 편의를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무안군수에 당선됐고 2014년 7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철저히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승진 또는 발주

한 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아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청탁 및 군청 사업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같은 범행 전력이 없고 공직에 있는 동안 공복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으며 비교적 경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광주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털려

광주 시내에 있는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지폐교환기가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15분 사이 4명의 용의자가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인형뽑기방 2곳의 지폐교환기에서 각각 100여 만 원과 7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용의자 4명 중 여성 2명이 망을 보는 사이 남성 2명이 기방에 담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민원 해결해 줄게” 뒷돈 받은 시의원 달미

아파트 신축 공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남 목포시의회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대행사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목포시의원 A(61)씨와 돈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 B(58)씨를 기소 의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점을 파시하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아파트는 최근 인·허가가 떨어져 공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공사비리에 연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건물 벽화에 래커 스프레이 뿌린 3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건물 외벽 벽화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55분께 광주 동구 불로동의 한 식당 건물 1층 외벽에 그려진 400만원 상당의 벽화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다.

조사 결과 농업인인 이씨는 벽화작가의 실력에 시샘이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받던 60대 독극물 추정 액체 마셔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갑자기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10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7분께 울산지법 내 한 형사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의자 A(60)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웃에 숨겨뒀던 작은 플라스틱병을 꺼내 안에 든 액체를 마셨다.

A씨는 산입단지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이날 오전 10시55분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치료를 받은 뒤 현재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만우절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만우절에 112에 전화해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옆에 있던 사람이 가져갔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A(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2분께 부산 중구의 한 교회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된 표를 가져갔다. 옆에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



멜로루 신터 장성군